

#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에 액비 불법 살포 '횡행'

## 불법 비료 살포 현장 급습

나주 밭 50톤 액비 살포중 '들통' 관계자 "행정신고 후 살포" 주장 확인 결과 '미신고·불법 살포' A조합 신고 후 B·C조합이 배출 '지자체 몰라' 현장 점검 없었다

나주에서 50톤의 액체비료를 불법 살포하던 현장이 지역 액비·농민단체 제보로 적발됐다.

액체비료 불법 살포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행정 기관에 신고 후 합법적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신고한 조합과 살포한 조합이 다른 '불법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조합이 액비 살포를 허가받으면 기타 미허가 조합들이 액비를 나눠 배출하는 식으로 방법을 피해 갔다. 지자체는 이 사이 시료 채취·점검 등의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함평의 액비·농민단체가 '나주 반남면에 위치한 논밭에 50톤의 액비가 불법 살포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남일보에 알렸다.

본보는 제보자와 현장을 찾아 50톤의 액비를 뿌린 뒤 도주하려던 A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목격했다. 50톤의 액비는 소규모 액비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일일 생산량과 맞먹는 높은 수치다.

A조합 관계자는 액비 살포가 불법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이들은 "나주시청에 액비 살포 허가·검사를 마쳤다. 떼땀하니 확인해 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나주시에 문의한 결과, A조합 관계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함평의 액비·농민단체 관계자가 최근 나주 반남면 한 논밭에서 액비를 불법 살포하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왼쪽) 불법으로 액비가 살포된 논.

A조합은 나주 소재 다른 액비영농조합법인 B·C조합과 함께 신고된 액비 배출량을 나눠 분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을 찾은 이날은 A·B조합이 지자체에 신고한 C조합의 50톤을 오전과 오후 각각 25톤씩 배출했다. 한 밭에 신고하지 않은 두 곳의 조합 액비가 뿌려진 것. A조합은 액비 살포 확인서 등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액비가 외부로 흐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울타리 등도 없었다.

액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포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시료 등을 채취해 부속도 검사 등 적법성을 확인해 '시비 처방서'를 받아야 한다. 살포 후엔 울타리를 치는 등 액비가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 처리도 필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자체

를 통해 벌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액비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나 주요 하천 등이 오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농작물 또한 노랑게 말라 죽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비점오염원인 분뇨는 산단·공장의 오폐수처럼 명확한 출처가 없어 세심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하천에 방류될 시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의 액비 살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도 문제로 나타났다. 나주 전자인계시스템에는 이날 C조합과 신청한 '액비 50톤 살포 내역'은 있었으나 A·B조합과 관련된 허가분은 없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액비 살포 당시 현장 상주나 시료 채



취 등 추가 점검을 하지 않았다.

함평 한 액비영농조합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액비 분출을 허가해주는 지자체가 많다. 뿌리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초 한 논에 액비 50톤을 뿌리겠다는 건 토지를 죽이겠다는 뜻이다. 이곳에 액비가 아닌 다른 성분이라도 섞었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나주 축산과 관계자는 "액비 살포가 허가된 것은 맞다. 다만 현장에서 부속도 검사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꾸준히 살포를 해왔던 조합들이다. 그간 큰 문제가 없어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조합을 나눠 살포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문제 된 부분에 대해 빠르게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C조합은 지난 2월 광산구 삼도동 인근 논지에 액비를 불법 과다 배출해 광주시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광산구는 나주시에 해당 조합을 고발하고 액비 성분 검사 등 관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지역 환경단체는 가축분뇨 폐기물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에 해당한다며 관할 기관의 적절한 규제·관리를 요청했다.

김종필 사무국장은 "농약처럼 액비도 정량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배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자료화해 관리하면 감독하기 수월하다. 전산화가 진행된다면 액비 생산 시작점인 축사 분뇨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글·사진=정성현·김상철 기자

## "5·18조사위 보고서 총체적 부실"

### 5·18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조사 부실 등 지적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5·18진상규명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5·18조사위,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23일 광주 북구 전남대 본부 옹골홀에서 '5·18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한인섭 서울대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사위의 지난 4년 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5·18조사위 관계자와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임수정 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희송 전남대 교수, 김재운 건국대 교수, 김정호 변호사, 주철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조사보고서를 졸속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강배 상임이사는 "여러 건의 '직권조사 사건 조사보고서'를 왜 조사활동 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해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사병 사건에 대해 혼란을 주는 두 개의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5·18조사위 측은 "많은 과제를 조사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고 권 일병 사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큰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부족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경희 조사위 팀장은 "이미 숨진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 심리부검 등 추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18 직후 발표 책임자 색출 등 다른 선결 과제에 피해자들의 증언이 묻히면서 조명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전원위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운 건국대는 "전원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보고서 전체에 대해 조사 미비를 사유로 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김희송 교수는 "비상임위원으로서 전원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진상규명 문제와 별개로 개별보고서에 5·18 왜곡의 또다른 개연성으로 활용될 여지가 포함되는 부분에 분명히 입장을 내온 것"이라며 "나아가 종합보고서에는 반드시 개별보고서가 귀결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이 기자

##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와 통합 본격 추진

### 양 대학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국립목포대가 글로벌인재양성 허브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립목포대(총장 송하철)와 전남도립대(총장 조명래)는 지난 22일 국립목포대 스마트회의실에서 양 대학 총장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대학간 통합 현안에 대한 사전분석 △지역의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통합 방안 △경쟁력 있는 통합대학 운영 전략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양 대학교는 대학 통합을 통해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대학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조명래전남도립대 총장은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전남도, 지자체 및 대학 간 지속적인 발전체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 국립목포대가 2024년 글로벌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2024년 글



국립목포대가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국립목포대 스마트회의실에서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목포대 제공

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돼, 양 대학 통합을 통한 전남 지역거점 캠퍼스 설치 및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전남지역에서 제일 큰 글로벌 거점 국립대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는 각 대학의 구성원 대표를 포함해 양 대학 동수로 구성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통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완료하고, 양 대학과 지역의 의견수렴 및 전남도와 기초지자체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 통합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 1월11일 대학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학 특성화와 글로벌대학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김혜인 기자